

일본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박영준*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을 7월 21일 시즈오카 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뒤이은 동경도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54석을 얻어 다수당으로 부상하자 일본의 자민당은 정치적 지지세력의 이탈을 실감하고 아소 타로(麻生太郎) 수상이 2009년 7월21일 중의원 해산 및 8월30일 중의원 총선거 실시를 공표하여 일본정국의 변혁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다.

본 정책포럼 보고서는 일본 민주당이 단독 혹은 연립의 형태로 정권을 잡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일본의 주요 대내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민주당의 기존 정책적 입장 및 공약 등을 통해 검토하고, 그러한 정책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자민당은 미일동맹의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민주당은 미국에 대한 대등성을 강조하며 이와 병행하여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의 분사 또는 독립추도 시설의 설치 그리고 영토갈등에 있어서도 신중하면서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인적으로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며 동아시아 공동통화 구상과 같은 다자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대외정책에서 있어서 기존 집권당인 자민당과 비교할 때, 민주당의 대외정책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커티스 교수와 같은 일본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이 두 정당의 차이는 토요타와 닛산의 차이 정도라고 언급하면서 차별성 보다는 유사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반도 정책 구상은 자민당에 비해서 전향적인 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정치인과 전문관료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과 이에 대한 해소 가능성,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외정세의 변화, 하토야마 당수의 지도력 등과 같은 제약 요인에 의해서 민주당의 외교안보 구상의 전개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자민당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낙관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동북아시아 비핵지대구상 등과 같은 긍정적 사안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대학교 교수

- 이 글은 일본 중의원 투표 이전인 2009년 8월 19일에 발표되었음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일본 정치의 구조와 최근의 변화
3. 민주당의 정책 성향
4. 민주당의 총선거 공약 분석: 외교안보 분야 중심
5. 민주당의 한반도 정책 구상
6. 한국 외교안보정책에의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 본 소고는 일본 민주당이 단독 혹은 연립의 형태로 정권을 잡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주요 대내외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민주당의 기존 정책적 입장 및 공약 등을 통해 검토하고, 그러한 정책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함.
- 아소 타로(麻生太郎) 수상이 자민당 지지도의 급감에 직면하여 2009년 7월21일 중의원 해산 및 8월30일 총선거 실시를 공표.
- 2009년 8월, 중의원 의석 분포 상황.
 - 자민당 303석, 공명당 31석, 민주당 112석, 사민당 7석, 국민신당 5석.
 - 제1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240석 확보를 위해 기존의석의 2배 이상을 획득하고, 자민당이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30여석을 합하더라도 기존의석에서 100석 가까이 잃고 210석 미만의 의석을 확보하는 상황이 되어야 함.
- 최근 일본 정치의 흐름이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중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기존의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지배체제를 끝내고, 민주당 주도의 연립 혹은 단독의 형태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짐.
 - 이럴 경우 일본 정국은 1996년 이래 지속되어온 자민당 주도의 정치에서 민주당 주도하에 전환되게 됨
 -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1955년 이래 지속되어온 55년 체제, 즉 보수·혁신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자민·민주당간 보수 양당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농후해짐

2. 일본 정치의 구조와 최근의 변화

가. 일본 정치와 정당의 구조

- 일본은 양원 체제하의 의원내각제 정치구조를 갖고 있음.

- 참의원(參議院, 참원으로 약칭)은 총 242의석으로 구성되며 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 마다 과반수를 선출.
- 중의원(衆議院, 중원으로 약칭)은 총 480의석으로 의원 임기 4년이지만 수상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중도 해산 가능.
- 1996년 이후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병립제를 실시.
- 참의원과 중의원 간의 관계는 미묘한 측면이 많으나, 중의원을 통과하여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라 할지라도 다시 중의원에서 다수로 가결되면 법안으로 성립되는 헌법 조항이 있어 중의원이 정치적 책임과 권한을 보다 많이 갖는 것으로 이해됨.
- 주요 정당은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사민당, 공산당, 국민신당.
 - 현재 연립을 맺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보수진영이라고 한다면 사민당과 공산당이 진보진영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민주당은 자민당에서 이탈한 세력, 구사회당 및 민주사회당계열로 형성된 정당으로 중도보수 및 중도좌파를 망라한 정치세력의 성격을 가짐.
- 2001-2006년 간 자민당의 고이즈미 주니치로(小泉純一郎) 수상 집권시기에는 성역 없는 구조 개혁의 슬로건을 제창하여 국민적 인기를 모았음.
 - 그 결과 자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2004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 115석, 민주당 82석, 공명 24석, 공산 9석, 사민 5석을 차지함.
 - 2005년 9월, 중의원 선거 결과도 자민당 압승으로, 선거결과는 자민당 296석 (총전 246석), 민주당 113석(총전 176석), 공명당 34석, 공산당 9석, 사민당 6석 등으로 분포함.

나. 일본 정치의 최근 변화

- 2006년 9월, 고이즈미 사임 이후 자민당 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06.9-),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07.9-), 아소 타로(麻生太郎, 08.9-) 수상이 연이어 집권하는 기간에 자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전개됨.
 - 2007년 8월, 참의원 선거 결과, 참의원 내에서 민주당이 제1당

최근 자민당 지지도 하락, 민주당에 기대감 증대

참의원 민주당 장악,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약진

으로 부상하여 의석 분포가 민주당 112석, 자민당 84석, 공명당 20석, 공산당 7, 사민당 5, 국민신당 4 등으로 바뀔.

- 중의원은 2005년 9월 총선 이후 자민당이 연립 대상인 공명당과 제후를 통해 2/3를 넘는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지만, 참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현상 발생.
- 이로 인해 자민당이 주도하는 주요 법률안이 민주당 다수인 참의원에서 부결되어 다시 중의원에서 가결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위 네지레(ねじれ) 국회 (비틀린 또는 꼬인 국회)현상으로 정치의 불안정이 장기화됨.

○ 일반 민심의 자민당 이탈, 그리고 이에 따른 민주당에의 기대감 증가는 2007년 8월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8년 10월,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자민당 32%에 비해 민주당은 23%의 지지를 얻었음.
- 중원 선거 시 지지 정당에 있어서는 자민당 33%에 반해 민주당은 43%를 얻었음.
- 바람직한 정권의 형태에 대해서 자민당 중심이라는 의견이 34%임에 반해 민주당 중심이라는 의견은 40%를 차지함.
- 전통적 자민당 지지층은 확인되지만, 자민당 이외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증가함.

○ 2009년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발생.

- 2009년 7월 5일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
- 2009년 7월 12일 동경도 의회 의원 선거(총원 127석)에서 자민당 38석 (중전 48석), 민주당 54석 (중전 34석)으로 민주당이 제1당으로 부상함.
- 올해 들어와서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공히 표심이 자민당 이탈, 민주당 경사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다. 자민당 약화, 민주당 지지도 증가의 요인

- 장기적 트렌드로서는 자민당 장기집권과 세습정치, 정경유착 등 기존 정치적 관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약화를 지적하는 의견 존재.
- 2005년 이후 자민당 이탈이 급격히 증가한 요인으로는 고이즈

미의 뒤를 이은 아베(2006년 9월), 후쿠다(2007년 9월), 아소(2008년 9월) 수상이 공통적으로 1년 미만의 임기를 지내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고이즈미처럼 국민을 결집시키고 기대감을 자아내게 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지적됨.

- 일본 사회에는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갖는 개혁정책 결과 종신고용제 붕괴, 소득격차 확대, 양극화 심화, 빈곤층 증가, 중산층 위기의식 고조 등의 특징이 나타났음.
- 자민당 정권은 이러한 국민들의 실생활과 유리되어 “자유와 번영의 호” 구축, 지속적 경제성장 추진 등 거대담론 중시.
-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격차시정, 어린이 수당 신설, 국회의원 세습제 제한 등의 국민 실생활 중심의 슬로건을 제시하여 지지도를 결집시키는데 성공함.
- 2007년 1월 20일 아사히 신문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의 경제성장과 민주당의 격차시정,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경제성장에 30% 그리고 격차시정에 45%가 지지를 보냄.
- 여론 조사에 나타난 이러한 흐름이 이번 중의원 총선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3. 민주당의 정책 성향

가. 일본 민주당 역사 및 의원구성

- 일본 민주당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민당 이탈 세력, 민주사회당계열 등으로 중도보수 및 중도좌파를 망라한 정치세력으로 그 역사와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993년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오카다 카스야 등 자민당 이탈.
- 1994년 사민당(구 사회당) 출신 영입.
- 1996년 간 나오토, 하토야마 유키오 등 민주당 창당.
- 1998년 민정당 합류.
- 2003년 오자와 당수의 자유당과 통합.
- 주요 계파는 오자와 그룹 50명 전후, 하토야마 그룹 30명 전후, 구 민사당 그룹 25명, 구 사회당 그룹 20명 전후, 간 나오토 그

*자민당의 장기집권,
세습정치, 정경유착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민주당의 다양한
계파의 특징과
성향을 분석할 필요

룹 20명 전후, 마에하라 그룹 20명 전후, 하타 그룹 10명 전후로 구성되어 있음.

나. 민주당 지도부 성향

-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 까지 당대표를 지낸 마에하라 세이시(前原誠司, 당시 43세)는 현실주의자로 평가됨.
 - 교토대학 법학부,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으로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 참가 및 다국적군 참가 지지함.
 - 2005년 12월 미국 및 중국 방문시 중국 군사 위협론을 주장함.
 - 헌법 제9조 2항의 개정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며 자위권의 명기를 주장하며 “1000 해리 이외 지역도 일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함.
- 2006년 4월 - 2009년 5월까지 대표를 지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는 자민당 출신으로 보통국가론의 기획자로 알려져 있음.
 - 게이오대학 출신으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문하생으로 알려짐.
 - 1993년 『일본개조계획』집필하여 보통국가론 주창.
 - 2003년 자유당 당수로서 민주당과 통합을 주도함.
 - 미국과의 대등한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며 종전 대미외교는 추수주의로 비판함.
 -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국제사회와의 합의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개시하였으므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관계없는 지역에 일본이 미국을 지원하여 부대 파견 및 공동작전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함.
 - 2007년 8월 주일 미국대사에게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함.
 - 2009년 2월 주일 미군에 대해서는 미국 제7함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일본에 실전부대 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 다만 일본의 자위대가 유엔의 지휘를 받는 경우에는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활동에 참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에 반해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하여, 매년 민주당 주도하에 중국 방문단 인솔하여 의원 외교를 주도함.
 -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A급 전범 분사 주장함.

- 2009년 5월에 취임한 현직 대표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1947-)는 자민당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민주당에 참여함.
 - 동경대 공학부를 졸업하고 스탠포드대학 공학박사를 취득한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
 - 조부가 하토야마 이치로 수상이며, 부친이 외상을 역임하고, 동생이 자민당 거물의원인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다원화된 대외 관계를 지지하며 외교이념으로 우애를 강조함.
 -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지론으로 2009년 6월 5일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아시아 공동통화 구상을 제시함.
 - 독도와 같은 지역 내 영토갈등 등은 2국간 교섭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역적 통합 추진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2009년 5월에 취임한 오카다 가츠야(岡田克也) 간사장은 민주당의 유력인사로 평가됨.
 - 동경대를 졸업한 통산성 관료 출신으로 민주당 전 대표 역임.
 - 민주당 해군축 의원추진연맹 회장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주창.
 - 2009년 7월 일본 영주 외국인에게 참정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등 주변국에 대하여 전향적 입장을 표명함.

다. 분야별 정책성향: 2001-2009년간 주요 정책과 법안에 대한 입장

- 외교정책에 있어서 자민당은 미일동맹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민주당은 미국에 대한 대등성 강조, 아시아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주장함.
- 방위정책에 관하여 자민당은 보통국가화 노선으로 대변되는 우경화 노선을 취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격에 대응하는 의미의 전수방위 원칙을 강조함.
- 경제정책에 있어서 자민당은 경제성장 노선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은 격차시정과 분배 균형을 강조함.

주요 정책 및 법안
관련 자민당과
민주당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
필요

민주당은 미국에
대한 대등성 및
아시아와의 협력강화
주장

- 역사문제, 영토문제, 야스쿠니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은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 분사 또는 독립 추도시설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한편 북방영토 및 독도 등의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지만, 다만 독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주요 외교안보 정책과 법률안에 대한 자민당과 민주당 입장은 아래의 표에서 같이 비교할 수 있음

	자민당	민주당
2001년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아프간 전쟁 지원)	연장 찬성	반대
2003년 이라크 부흥지원특별조치법	연장 찬성	반대
07.4 해양기본법,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	초당파 공동입법	초당파 공동입법
08.1 보급지원법		반대
국제평화협력활동 기본법	공동발의	공동발의
08.5 우주기본법	공동제출	공동제출
09.4 해적대처법안		주체 해상보안청 요구 국회 사전승인
08.4 주일미군주둔경비 일본측 부담 연장 특별협정		반대
08.6 지구온난화	2020년까지 8% 삭감	2020년까지 25% 삭감
09.5 방위성설치법 개정안	찬성	찬성
09.6 해적대처법	찬성	부분 반대

- 미국의 대테러 전쟁관련 지원법안, 해외파병 활동 등에 대해 자민당과 대립하고 있음.
 - 2001년 10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대하여 민주당은 성립 및 연장 반대함.
 - 그 근거로 오자와 당수는 2007년 8월 아프간 전쟁은 국제사회와 합의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개시한 전쟁으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관계없는 지역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작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라크 부흥지원특별조치법, 보급지원법에 대하여 민주당은 반대를 표명함.

- 2008년 4월 주일미군 주둔경비 일본측 부담분 연장 특별협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를 표명함.
- 2009년 6월 해적대처법, 소말리아 해상에서 외국 선박 보호 가능성에 대하여 민주당은 국회 사전 승인 및 해상보안청 주체 기관을 요구.
- 개헌에 관해서 민주당은 자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론을 피력함.
 - 2007년 8월 아사히신문과 동경대학이 공동으로 참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 결과 자민당 내 개헌찬성파가 91%임에 반해 민주당 내 개헌찬성파는 29%에 불과하고 개헌반대파는 41%에 달함.
 - 2005년 10월 민주당 헌법조사회 헌법 제언에서 ①국민주권사회, ②인권보장, 환경권, 중시, ③평화창조국가, ④분권국가, ⑤전통과 문화의 존중을 발표함.
- 일본의 국가이익과 관련된 법안, 대외적 지위 향상 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동일한 입장.
 - 2007년 4월 해양기본법과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을 통해 해양정책본부 설치, 해양기본계획 수립, 배타적 경제수역 내 일본 권한 강화, 해양주권 강화 및 해양정책 체계 수립 목표를 설정.
 - 2008년 5월 우주기본법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수정하여 방위목적,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우주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주개발전략본부 설치와 정찰위성 도입을 가능하게 함.
 - 국제평화협력활동 기본법은 유엔 결의에 따라 국회 사전 승인을 거쳐 비전투지역에 자위대원 파견을 명시함.
 - 2009년 5월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에서는 방위성내 참사관 제도 폐지, 간부회의 설치, 방위상 보좌관 3인 신설을 명시함.
- 자민당과 민주당의 일련의 정책에 대하여 컬럼비아 대학 제럴드 커티스 교수는 두 정당의 차이를 토요타와 닛산의 차이 정도라고 언급함.

**국가이익의 실현 및
대외 지위 향상
관련해서는 자민당과
동일한 입장**

정권공약
매니페스토는 변화와
연속성의 공존을
드러냄

4. 민주당의 총선거 공약 분석: 외교안보 분야 중심

- 2009년 7월 23일 민주당은 2009년판 정책자료집 발간하고, 7월 27일에 정권공약 매니페스토를 발표했으나 언론발표 후 비판이 이어짐.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은 8월 11일에 수정한 매니페스토 확정판을 발표함.

가. 국내정치

- 정책결정시스템의 재조정
 - 수상 직속의 국가전략국 설치하여 국가의 비전 및 예산 골격 결정과 예산편성 기능을 재무성에서 수상관저로 이관하여 정책 결정의 핵심을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이관하고자 함.
 - 민주당 100인의 국회의원을 정부 각료, 부대신, 정무관 등으로 각 부처로 파견, 관료 주도가 아닌 정치가 주도의 정책결정시스템 구축함.
 - 각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종전의 사무차관회의를 대체함으로써 정치인 출신의 각료들이 주요부서 간 의견 교환 및 정책조정 주체가 됨.
 - 정치가 세습 제한제도를 통해 동일 선거구에서 3촌 이내 친족 입후보 인정하지 않음.
 - 낙하산 인사 폐지.
 - 중의원 정수 80석 삭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기구 설치.
- 경제정책
 - 어린이 수당 창설, 중학생 이하 어린이 1인당 월 2만6천엔 지급안 발표로 중산층 지지 증가.
 - 고속도로 무료화, 가솔린 세금 잠정세율 철폐, 소비세 4년간 인상 동결.
 -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11%
 -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약속
- 사회정책
 - 국공립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안

- 국민연금, 샐러리맨 연금 일원화
- 의사의 수 증대 방안 마련
- 지방 주권의 강화 약속

나. 외교 및 안보정책

- 자민당의 대미 추종외교를 비판하고, 미국과의 대등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미군재편과 주일미군기지 협상 재검토 추진.
 -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외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추진.
 - 인도양 급유지원활동은 당분간 유지.
 - 미일지위협정을 개정.
 - 미일 FTA 협정 체결 교섭 추진.
- 핵폐기에는 적극적 의견 개진.
 - NPT체제의 유지 강화, 인도 등의 NPT 가입 촉구, 동북아시아 비핵시대 구상, 컷오프조약 조기 실현, CTBT 조기발효 등 주장.
- 자위권 행사는 전수방위(專守防衛)에 한정함.
 - 아소 수상이 조직하여 2009년 1월에 발표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최종 보고서 평가 절하.
 - 대규모 테러, 대규모 자연재해 등 위기관리 체제 구축 위해 정 보수집 체제 강화, 위기관리청 신설 추진.
- 지구온난화 대책
 - 온실효과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 목표.
-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있어서 동아시아 공동통화 실현을 위해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재해구원, 감염증 대책 등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 강화 도모.
- 하토야마 대표는 아시아 경제통합과 집단적 안전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일본 헌법의 이상인 평화주의와 국제협조주의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

*미국과의 대등한
파트너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
강화 도모*

동북아 비핵지대화**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추진이 주요 이슈로****등장****5. 민주당의 한반도 정책 구상**

-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민주당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동북아시아 비핵지대구상과 연동되고 있음
 - 오카다와 하토야마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은 일본, 한국, 북한을 비핵지대 국가로 규정, 핵무기의 실험, 보유,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 동시에 중국,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에 대해 비핵지대 국가에 대해 선제 핵사용 금지를 명시한 6개국 간 조약 체결 주장.

가. 대한(對韓) 정책 이슈

- 민주당은 자민당에 비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강함.
 - 오자와 이치로 전 당수는 한국인 연구자를 비서로 채용한 바 있음.
 - 하토야마 당수도 2009년 6월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
 - 민주당 내 마에하라 전 대표가 회장으로 활동하는 한반도정책연구 의원모임에는 나가시마 아키히사 의원 등이 포함.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및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의 대상으로 한국을 보고 있음.
- 2009년 7월 31일 오카다 간사장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는 검정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가 세세하게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는 독자적 추도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관하여 1998년 민주당이 외국인들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당 기본정책으로 명기하고 오카다 간사장은 일본 내 영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2009년 7월 31일 오카다 간사장은 독도를 북방영토와 더불어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하고 독도 문제는 양국 정부가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힘.

나. 대북(對北) 정책 이슈

- 원칙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하여 대북 화물선 검사 실시 등 단호한 조치를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함.
-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북한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 이전 일북 간 국교정상화는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
 - 민주당은 대북 현안 해결에 있어 중국을 보다 활용하는 정책을 구사하려고 함.
 - 오자와 전 대표가 중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공산당과 정당 간 협의기구를 구축하려고 함.
 -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표면적으로는 대북 강경정책이 주도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중국을 활용한 대북 압박 및 설득 정책이 병행될 가능성이 큼.

6. 한국 외교안보정책에의 시사점

-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외교안보 정책을 현재 제시하고 있는 구상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변수들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민주당 정치인의 관료 장악력과 정치인과 관료사이의 갈등 해소능력 여부.
 -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일본 정치사상 가장 강력한 제1야당이 될 자민당과의 정책대립.
 -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외 정세 변화.
 - 하토야마 당수의 정치력과 리더십 여부.
- 이런 제약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대한반도 정책은 자민당에 비해 보다 안정적 한일관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독도문제 관리로 표현되는 영토문제, 야스쿠니 불참배, 대체시설 건립, 무라야마 담화 계승과 같은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자민당에 비해 신중하고 주변국 입장을 배려하는 특징을 보여줌.

**민주당 집권시 보다
안정적 한일관계가
전망됨**

**낙관적 요소를 활용하여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아시아 질서 실현
위한 전략적 안목 필요**

- 당 대표 및 소속 의원들도 한국에 관심이 많고 친화적인 인물들이 다수 포진.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등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접근 자세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이러한 낙관적인 요소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 이익과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자산으로서 대일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적 안목이 필요함.
- 우리의 국가이익은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안정적인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을 구축하여 외교, 경제 등의 국가위상을 강화하는 것임.
- 특히 일본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아시아 역내의 다자간 경제 및 안보협력 확대, 국제 질서상 우리의 국가위상 강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대상.
- 따라서 일본의 새로운 민주당 정권과 정상 간, 정치지도자 간, 경제단체, 언론인 및 학자 사이 등의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축, 활성화할 필요.
- 양국 간 갈등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북한의 평화적 개혁개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선제적, 적극적 대일정책 수립이 필요.
- 민주당 집권 시 주도적 대일관계의 구체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음.
 - 2010년 경술국치 1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일 간 과거사를 극복하고 양국 간 문제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적극적으로 표명.
 - 나아가 양국 간 및 역내 다자 협력확대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정상 간 공동 성명 등을 준비, 제안할 수 있음.
 - 이렇게 한일이 주도하는 공동성명에 중국 및 북한의 참가를 요청할 수도 있음.
- 민주당이 제창하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
 - 민주당 정권 장악 이후에 이 구상을 정식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 거듭된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것.
- NPT체제 이탈의 위험성, 한미원자력 협정 폐기로 인한 에너지 자원 유입 두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등 감내하기 힘든 비용이 수반될 것임.
- 이명박 대통령의 8.15 연설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유지를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 및 일본을 포함한 비핵지대 구상을 표명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핵 폐기,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선제 핵 불사용 선언을 일본과 공동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핵우산과 병행하는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우리가 주도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포괄하는 공동선언
제시할 필요*

참고문헌

- 小澤一郎, 『小澤主義』(集英社,2006)
- 岡田克也, 『アジアの中の日本としての安全保障政策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世界』 2009.7
- 鳩山由紀夫, 友愛외교 관련 논문『VOICE』2009.9
- _____, 『나의 정치철학』『동아일보』2009.8.10
- 鳩山由紀夫, 『わが政権構想：猛獣小沢をどう使う』『文芸春秋』2009.7
- 民主党, 『政権政策の基本方針:政策マグナカルタ』(2006.12)
- 民主黨 『民主黨 政策集: Index 2009』(2009.7.23) 민주당 홈페이지
- 民主黨 『政権交代:民主黨の政権政策: Manifesto』(2009.8.11) www.dpj.or.jp
- 『朝日新聞』
- 박철희, 『일본 민주당 집권하면 외교정책 바뀔까』『중앙일보』09.8.6
- Gerald Curtis, 『視點:09 衆院選』『読売新聞』 09.7.28.

편집: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